



금타 광주공장 이전 '제자리걸음' 계획안 제출 1년...부지 선정 난항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작업이 1년 여 동안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공장 이전을 계기로 미래차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려던 금호타이어의 구상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광주송정역 인근에 자리한 광주공장을 옮기기로 하고 지난해 8월 광주시에 이전계획안을 제출했다.

금호타이어는 설립된 지 60년이 된 광주공장을 이전하고 광주송정역과 인접한 기존의 부지를 개발해 시너지 효과를

현재 조성공사가 한창인 평동3차 일반 산업단지 가운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에 속해 있는 2단계 부지도 금호타이어 이전부지로 부상하기도 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금호타이어는 광주 외 지역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광주공장 이전계획에서 광주시나 광산구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 타지역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1년 가까이 금호타이어와 광주공장 이전 관련 협의를 계속해 온 광주시의 입

공장은 가동 중인 상황에서 도시계획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법적요건을 충족해 달라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 최대주주가 중국기업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개발차익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아 광주시는 '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은 회사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측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 용도변경, 후 사업부지 매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고 재정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대체부지 관련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아 이전작업이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행히 25일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관계자들과 만나 담보상대인 광주공장 이전 방안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기로 하면서 대안이 제시될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재희 광주시 투자유치과장은 "금호타이어의 구체적인 이전계획안을 상호 공유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전 관련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형택 기자

市 "먼저 이전 세부계획을"...회사 측 "부지 용도변경 우선"

오늘 광주시-금호타이어 집중협의 예정...협의결과 주목

낸다는 구상을 지난해 1월 내놨었다.

하지만 광주공장이 옮겨갈만한 적합한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면서 공장 이전 계획은 1년 넘게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부지는 42만㎡(12만7000여평)로 당초 광주 광산구와 전남 함평군에 공동으로 조성 중인 빛그린산단에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이 빛그린산단에 들어서면 남은 산업시설 용지는 16만㎡에 불과해 금호타이어를 수용할 수 없어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장은 단호하다.

지난해 8월 금호타이어가 광주시에 이전계획안을 제출했으나 광주시는 곧바로 이전부지 관련 세부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계획안을 반려했다.

공장이 이전할 부지에 대한 매입계획 등에 대한 세부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상 현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등의 승인을 먼저 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24일 "이전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전남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매년 증가

도비 추가 지원에 자부담 20%까지 완화...현재 8만7000명 가입

농작업 중 발생한 각종 재해와 질병에 대한 보상책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이 전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공약사항인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경감' 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비 9억 8000만 원 등 총 108억 원을 투입, 농업인 자부담을 기존 30%에서 20%까지 줄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는 전년 대비 3%이상 증가한 10만 9000명이 가입했으며, 올해 들어서 5월말 현재 8만 7000명이 가입했다.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5~87세의 농업인이다. 일반 1형의 경우 총 보험료 10만 1000원의 20%인 2만 원만 내면 가입할 수 있고, 기초수급자 등 영세농업인은 보험료가 무료다.

보장은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나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하거나 장애 발생과 치료 시 받을 수 있다. 산재형 상품의 경우 사망 시 최대 1억 3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질병 치료는 5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사망보험금 연장 특약제도가 도입돼 사망 시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까지 유족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곽홍섭 전남도 식량유통과과장은 "농촌 고령화로 농작업 중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가까운 농축협에서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해남군,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조사

귀속재산 의심 토지·건물 등

부동산 찾아 국유화 조치 예정

해남군은 일제강점 청산을 위해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시행되는 이번 조사는 공적 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창씨개명자의 성명 복구와 함께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을 색출해 국유화 조치를 하기 위해 진행된다.

귀속재산은 미군정에 몰수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소유의 농지, 주택, 기업 등의 재산을 말한다.

대상은 해남군내 토지 2070필지, 건물 9개소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지적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유화 대상은 6개월 간 공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국가소유로 귀속된다. 더불어 사유재산으로 밝혀진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의 정비는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돼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등재된 재산에 대해서는 지적부를 확인해 사유재산임을 입증해 후손들에게로 소유권이 변경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취소

영광군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오는 10월에 예정된 '2020년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를 취소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방역당국에서도 올 10월 대우행을 예고함에 따라 군에서는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소를 결정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군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12만여명의 관람객이 찾는 엑스포를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됐



다"면서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라는 브랜드 가치를 잃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